

李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산업발전·자산증식 마중물 될 것”

32차 수석보좌관회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 꼽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점검
“성장의 과실·기회 함께 나눠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지금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실제 종전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에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3월보다도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또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

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 모아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판매될 6000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 산업을 키우고 또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두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첨단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 투자는 우리 산업의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성장 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께서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시고 또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하여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 “1차 지급이 내일 마무리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 준 덕에 지급 과정에선 혼란과 불편이 작았다고 한다”며 “18일부터 진행될 2차 지급 역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게 남은 기간 사전 점검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1면 ‘노사갈등, 주주·정부’서 계속

각계각층 파업 우려 표명 직접 손실 30조 전망도

반면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전날 14.41% 급등했고 이날도 장중 4.14%까지 상승했다. 다만 씨티그룹 등 글로벌 IB에서는 노사 갈등에 따른 성과급 총담금 부담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등 파업 리스크는 여전히 불확실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도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노동자가 과도한 요구를 해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발언했다.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공개 석상에서 반도체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3%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 같은 각계 압박에 대해 노동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 측이 강경한 데는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경제적 부가치(EVA)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초과 이익성과급(OPI) 상한선을 연봉의 50%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를 운영하며 상한선까지 폐지한 상태이다. 이에 같은 반도체 업황에도 성과급 지급 방식과 규모에서 차이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다는 분석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직후 텔레그램을 통해 “LG(유플러스)보고 하는 소리”라며 “우리처럼 15%는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여론 악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는 단순한 임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측이 독점해온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가 협상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 손실이 최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연속 가동을 전제로 설계된 초정밀 공정으로, 가동이 멈출 경우 설비 재가동과 수율 복구에 상당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달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검증용 샘플을 전달하며 퀵 테스트에 돌입한 HBM4E 일정이 밀릴 경우 어렵게 회복한 글로벌 HBM 리더십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 인근에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5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수급위기 성공적으로 극복”

산업부, 물가억제·민생부담 완화 무게 “정유업계의 정당한 손실 100% 보전”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국내 석유 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누적된 인상요인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민생 부담 완화에 무게를 뒀다.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4차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1)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고정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의 엄중한 물가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쟁 발발 이후 3

월 2.2%에서 4월 2.6%로 가팔라졌다. 이는 2024년 7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석유류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22%나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운용을 통해 약 1.2%p의 물가 하락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제도적 통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8%에 달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석유 제품 가격 역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경유 2500원 수준까지 올랐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약 200원, 경유는 400원 이상 누적 인상 요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신학 산업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

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며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기민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정유업계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손실에 대해 100% 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제1원칙”이라며 “5월 중 법률·회계·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정유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정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가동된 범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통해 원유와 나프타 수급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원유의 경우 UAE 특사 물량(총 2400만 배럴)이 성공적으로 도입 중이며, 정

부 비축유를 정유사에 빌려주는 ‘비축유 스왑(SWAP)’을 통해 공급 차질을 완화했다. 5.6일 기준 약 1650만 배럴 규모의 스왑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5~7월 사이 예년 대비 80% 이상인 약 2억 1000만 배럴의 원유가 도입될 예정이다. 문 차관은 “5~7월 평균 원유 확보량은 약 7000만 배럴로 전년 대비 80% 이상 수준이며, 나프타 역시 평시의 90% 이상 물량을 확보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사우디(2.5억 배럴), 카자흐스탄(1800만 배럴), 오만(500만 배럴) 등 특사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비(非)중동산 원유에 대한 운송비 차액 지원을 8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스왑 운영 기간도 7월까지 연장을 검토하는 등 도입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구윤철 “석유최고가가격제, 물가방어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 민생밀접품목 일일점검·집중관리

정부는 석유최고가가격제(공급가 상한)가 물가 방어 측면에서 상당 부분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후반까지 치솟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랐다.

정부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회의를 갖

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관계장관 TF를 중심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일일점검 및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석유최고가가격제 시행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상당 폭 흡수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석유류 가격이 낮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물가 상방 압력은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고 봤다.

재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중동전쟁 영향,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 상승 압력이 높았으나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에 힘입어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석유최고가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3월 물가 상승률은 2.8%, 4월은 3.8%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미시행시 휘발유 값은 리터(1)당 2200원, 경유 값은 2800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내 물가 상승 폭은 주요국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3월 기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일

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2%대 중반~3%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주유소 현장점검 강화, 매점매석 행위 무관용 대응, 대체원유 확보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부문 유류비 지원 등 추경 사업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먹거리·가공식품 등 민생밀접품목도 집중 관리한다. 이달 5~6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유통경로별 자체 할인행사를 병행 추진한다. 특히 우려 품목에 대해 선 수입 다변화 및 정부비축 방출 등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세종=김연애 기자 kys@



metro